



세계의 학교 시민교육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의 시민교육

양 설

경기도 성남여자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미국의 교육관계자들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터득하고 10년 전부터 '시민' 과목을 교과 과정에 편입시키고, 수준 높은 교육 자료를 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여러 시민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남대문 방화 사건을 보라.) 이제 학생들에게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실천하는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 각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지침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작하고 있는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라는 곳이 있다. 주요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이 센터는 미국 시민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미국 시민 과목의 '표준(National Standards)'을 정했다. 미국의 시민교육이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여기서는 이 기관에서 만든 <민주주의의 기초(The Foundation of Democracy)>라는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터득한다.

다음은 <민주주의의 기초 - 사생활 보호(Privacy)> 중학교 과정에 등장하는 예제이다.

1. 알렉스는 여자친구와의 통화 내용을 동생이 듣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다



2. 카를로스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회사 사장님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침해받기 쉬운 '사생활 보호' 라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기 위한 예제들이다. 학생들은 이런 주제를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여러 견해를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생각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윤리 교육, 더욱이 암기 과목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학습하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하는 교육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개인을 양성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가치는 충돌하되 정해진 답은 없다.

다음 예제는 사생활 보호권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권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1. 중세 유럽 사람들은 길가의 아무 곳에서도 배변을 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
2. 랜디는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없어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한다. 그러나 새런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몇 가지를 혼자 간직하고 있다.
3. 이슬람 국가의 여자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린다.
4. 비밀로 하기로 한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도와야 할지 갈등이 된다.

사생활 보호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치인가?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가? <민주주의의 기초>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여 고민하게 한다.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남겨놓는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이든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재의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석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지적인 도구(intellectual tool)’라 명명된 이 표는 문제 해결의 순서와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질문의 형태로 적혀 있고, 학생들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

‘정의(Justice)’의 문제를 다룰 때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에 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예를 보라.

- (1) 그 사람의 정신상태는 어떠했는가?
 - a. 의도를 품고 행동하였는가?
 - b.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였는가?
 - c.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는가?
 - d.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가?
 - e. 통제력이나 판단력이 있었는가?
 - f. 그렇게 행동할 의무나 책임이 있었는가?
 - g. 다른 중요한 가치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 (2) 판결을 위해 그 사람의 과거 행동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 (3) 공정한 판결을 위해 그 사람의 특징 중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 (4)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후에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표현했는가?
- (5)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위에서 제시한 예처럼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 보다 작은 범주에서부터 차근차근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토론을 통해 사고력을 증대하고, 역할극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체득한다.

〈민주주의의 기초 - 정의(Justice)〉에서 ‘분배적 정의’ 부분 중 “여러분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을 어떻게 선출하나요?”라는 단원이 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교육



부가 음악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금을 주었다고 가정하고 그 프로그램에 어떤 아이들을 참여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학교 청문회 역할극을 벌이도록 되어 있다.

학급 학생들은 ① 학교 교장선생님과 참모진 ② 교육의 형평성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 모임 ③ 최상의 음악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④ 학교 의회 등의 구성원으로 나뉘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을 준비하고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소통의 기술을 배우고, 사회성을 익히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체득하게 된다. 단원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적용학습' 단계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실에 초대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나 판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뿐 아니라 지역 도서관 사서, 학생 대표, 교직원 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미국의 교실은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바깥과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연령, 직업, 종교, 인종의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일 수는 없다. 실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했을 뿐,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적 경험은 우리에게도 만만찮게 축적되어 있으며, 그 동안의 민주화 경험 속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은 우리의 급한 성격만큼이나 훌쩍 성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민교육의 첫걸음을 떤 우리로선 미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게 분명하다. 민주주의라는 거대 담론을 현실화시키려면 사소하리만치 작은 절차에서부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한 훈련이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교육의 최대 수출국이 되기를 원하는 미국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에는 세밀하게 고안된 시스템이 거대한 바위처럼 버티고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런 체계화된 시민교육의 틀이 아닌가 싶다.



영국의 시민교육

박선영

영국 버밍엄대학교 시민교육학 박사.

영국 TV 프로그램 중 ‘빅 브라더스’ 라는 쇼가 있다. 이 쇼는 참가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24시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여과 없이 생방송 또는 중계방송으로 내보내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자의 의견과 내부 경쟁을 통해 참가자들을 하나씩 방출하여 최후까지 남는 사람을 승자로 뽑는다. 평소에는 일반인들로 구성되는데, 1월 특집 쇼에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 쇼에 참여한 제이드 구디라는 20대 연예인이 말썽이 되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인도의 톱 모델 실파 세티에게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거침없이 보여줌으로써 영국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물론 영국과 인도 간의 국가적 긴장감까지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공인이 인도인과 인도 문화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공식석상에서 쏟아놓는 것도 모자라 영국 방송이 보란 듯이 그것을 내보냈으니 인도 정부가 발끈할 만도 했다. 어쨌거나 제이드 구디는 쇼에서 퇴출되었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녀가 일으켰던 해프닝은 엉뚱한 곳으로 불뚱이 튀었다. 영국인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친 거냐고 그녀가 다녔던 학교를 맹비난했던 것이다. 학교 측은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미처 가르칠 시간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영국 시민교육의 덕목

제이드 구디 사건 덕분에 영국의 시민교육은 오히려 힘을 받게 되었다. 시민교육 과목의 정규 교과 도입은 토니 블레어 총리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으로 손꼽혔으나,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면서 노동당의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비판 받는 바람에 그 빛이 점점 바



라고 있었던 것이다. 제이드 구디는 시민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영국인들 사이에 깊게 파고들었다.

영국에서는 2002년 새 학기부터 시민교육이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법정 의무 교과목이 되었고, 초등학교에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등장했다. 시민교육의 등장이 너무 갑작스러워 보일지라도 사실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1960년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많은 학자와 실천가들의 노력의 결과로 정규 과목까지 된 것이었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크게 세 가지 덕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 사회적 · 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 정치문해(political literacy, 정치에 대한 지식?기술?가치를 갖추는 것)

영국의 시민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 도덕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지역과 국가 정치에 공헌하는 적극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시민 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입되는 개가를 올렸음에도 지금까지 시민교육을 가르칠 전문 교사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때문에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시민교육 과목과 내용이 겹치는 일부 과목들과 연계하여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자유주의 교육전통을 이어 받은 탓에 특정한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기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교사의 재량껏 어떤 자료나 도서도 활용할 수 있다.

시민교육의 효과

영국에서는 시민교육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이 매년 발간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 교과를 가르치고 나니 학생들의 정치문해력이 향상되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지식 위주의 학습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지만, 시민으로서의 기본 지식을 습득한 뒤 청소년 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여러 실천 프로그램에 직



접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지식이 체화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시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커졌고 인권의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 안에 시민 과목이 필수 교과로 지정된 것은 부러운 일이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어려서부터 갖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자산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 사회의 모습이 다르듯이, 시민교육이 요구하는 바도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의 방송 매체를 통해 한국의 성인,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험악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시민교육만 받았더라도...” 하는 마음을 자주 갖게 된다. 영국 시민교육의 예를 통해 한국형 시민교육이 하루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프랑스의 시민교육

김원태

산본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시민교육과 관련이 깊은 한국의 도덕 교과서는 타율적 도덕, 국가주의의 강조, 획일적 질서의 절대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과 사회 과목을 그저 암기 과목으로밖에는 인식하지 못한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특징

프랑스 학생들은 평등, 정의, 인권,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 등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보통 실업으로 인한 문제,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이 시민교육 시간에 학습 자료로 활용된다. '학교 교육은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한국식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개념만을 가르쳐서는 교육이 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성인이 된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등장과 배경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민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식민지들의 해방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비사회의 도래, 국내 정



치 역학의 변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같은 새로운 개념이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다고 60년대에 시민교육과목이 독립된 교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지리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시민교육 단원을 가르치는 형태를 띠고 있었을 뿐이다.

70년대는 사실상 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사라진 시기였다. 진보적 지식인층은 시민교육을 국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의심했고, 교육당국은 교사들이 시민교육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급진적인 정치교육을 시킬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70년대 시민교육은 이전의 능동적, 참여적 민주시민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주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소비자교육으로 전환되었다.

80년대에 이르러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 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침내 1985년 11월 시민교육의 부활이 선언되면서 시민교육은 중학교 필수과목(주1시간)으로 다시 지정되었다. 일각에선 시민교육을 문제 학생의 선도나 학내폭력의 예방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기도 했지만, 십여 년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토론 중심의 수업 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1998년, 시민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포함됨으로써 마침내 중등교육 전 과정에 자리를 잡았다.

다음은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해 본 것이다. 굳이 설명을 하기보다 단순한 차례 정리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나라에도 시민교육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 4, 5학년 과정

1.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종교의 자유)
2. 우리는 정의가 필요하다. (세계의 가난)
3.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 (이념의 강요)
4. 우리는 일이 필요하다. (어린이 강제 노동)
5. 우리는 토론이 필요하다. (TV 토론의 예)
6.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팀으로 일하기)
7. 우리는 건강한 삶이 필요하다. (예방의 중요성)



8. 우리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다. (공해 문제의 심각성)
9.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일상생활에서의 시민의 권리)
10.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11.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12. 정의란 무엇인가?
13. 교육을 받을 권리란 무엇인가?
14.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란 무엇인가?
15. 왜 각 나라는 서로 도와야 하는가?



독일의 시민교육

이인선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독일의 시민교육(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은 정규 교과로 학교에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우선 각 주에 있는 주정치교육원과 시민학교(Volkshochschule) 등이 있고, 독일의 각 정당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러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세미나, 강연 등을 조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교육은 최소한의 합의로!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체 반성과 더불어 자국민에 대한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전쟁 직후 행해진 정치교육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독일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60 - 70년대 정치교육도 각 단체와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치교육에 대한 시각과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정치교육의 형태도 제각각이었다. 그러다 1976년 여러 정치학자와 교육 관계자들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독일 정치교육의 근본 방향이 정해지게 되었다. 각 정파나 정당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에서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둘째,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현재 정치 상황을 분석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민주정치 교육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체로 각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7개 자치주의 정치교육 주제

독일에서는 교육에 대한 주권을 각 자치주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법 및 교육행정도 자치주별로 독립되어 있다. 교과서 역시 자치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잘 부합하고 있다. 다음은 독일 7개 자치주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교육의 주제를 정리해 본 것이다.

1. 학교생활 :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 해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 함께 하기, 장애 학생과 함께 하기 등
2. 가족생활 : 세대 간의 갈등, 가족 내의 역할 분담, 실업 등
3. 소비생활 : 시장 원리의 이해, 소비자의 권리 이해 등
4. 환경문제 : 상품 포장의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5. 법률문제 : 청소년 범죄, 외국인 범죄 등
6. 정보의 활용 : 정보 전달 및 감별 능력 등
7. 정부조직 : 의회의 조직, 법의 제정 과정, 여야의 주요 논쟁 주제 등
8. 지방자치 : 지역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 제시 등
9. 노동문제 : 기술의 발전, 노동조직의 변화, 노동시간의 유연성 등
10. 세계평화 : 제3세계의 빈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국제 난민 등

교과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은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를 스스로 정하고 모둠을 결성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학생들은 모둠을 결성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교과서들은 단순한 토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제와 관련된 역할극, 브레인스토밍, 벽신문 같은 구체적 실행 방법들은 물론,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토론 역시 패널 토론, 모둠 토론, 찬반 토론 같은 다양한 방식을 권하고 있다. 물론 제도적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시민이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치즘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독일 사회는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의 시민교육

송용구

동경학예대학교 학교교육학 박사 과정

스웨덴의 시민교육은 별도의 교과로 독립되어 있진 않고 사회과 과목에 시민교육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사회과 과목 전체가 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교육에 할애하는 부분이 절대적이다.

스웨덴 시민교육의 특징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정과 학교의 관계 설정에 관한 부분인데,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가정이고 학교의 역할은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학생들에게 시민성을 길러주는 것이 학교의 임무라는 의식이다. 즉, 차별대우나 불관용 등에 맞서서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지켜내고, 이를 위해 약자와의 연대감을 키우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부터 민주적 절차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 대표가 교사나 지역 대표와 함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은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14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에 시의원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평등의식과 평생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성인 역시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째, 학생의 수업 참여를 확대한다. 학생들은 수업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교과서의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고 학습 의욕과 의지를 더 갖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 교과서들의 내용과 방향

위에서 언급한 시민교육의 특성에 알맞게 스웨덴의 교과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재밌어할 만한 내용을 주로 담는다. 예를 들면, 1장 ‘법과 권리’ 부분에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출발하여, 폭력사태를 일으킨 학생이 그 사태 이후 겪게 되는 여러 법적 절차 및 경찰 재판소, 범죄자 교정시설 등 관계되는 기관에 대한 학습이 진행된다.
2.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문제에 참가를 격려하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3.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5장 ‘사회보장’ 부분에선 어려운 사태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며, 어느 기관이 그것을 담당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스웨덴의 학교 관리청 공개 문서를 보면 그들이 학교 교육에 얼마나 세심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사회과 개정판을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위원회에 참가한 33명은 주제별로 4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33명의 위원들은 사회 주요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사회과 과목에 사회 전체의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일처리에 급급한 관료 몇몇과 학교 현장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학자 몇 명이 급조한 교육과정, 또한 없어도 그만인 형식적인 공청회까지 곁들인 우리의 교육제도와 거기에 어울리는 교과서라는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약자와 연대하며 차별대우와 불관용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제치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